

## [토론 요지]

## 수도권 관리정책에 대한 광주 전남 시민 사회의 견해

김 기 흥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분명하게 후퇴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대체되었지만 그 역할은 전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정권 차원에서 균형발전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이기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듯하다. 단적인 예로 2011년 올해만 해도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발의를 비롯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까지 수도권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재정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1,178건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중앙집권 강화에 더욱 집중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되었다. 이미 연구된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 혼잡 비용은 8조가 넘을 정도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산업 생산성이 높아 확보된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확보된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불균형에 의한 사회적 갈등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상대적 낙후도가 심한 광주와 전남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져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 반응으로 나타날 개연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부족하다는데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관리 정책에 대한 입장은 불필요한 규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더욱 요원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국가 운영의 근본적 고민이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국가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견해부터 새롭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공허한 주장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개발 시대의 논리에 사로잡혀 중앙 집중의 효과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중앙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통해 재정과 권한을 나누고 거기에 걸 맞는 책임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수도권 관리 정책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고민하여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